

보도일시	2026. 8. 27(목) 배포 즉시	사진	×	자료	○	매수	3
담당부서	경기연구원 (AI연구실)	내용문의	이승환 AI연구실장 (031-250-3147)				
		홍보담당	정대영 연구기획실장 (031-250-3262)				
		보도자료	김성진 성과확산부장 (031-250-3292)				

경기도민 10명 중 7명 “AI가 일자리 줄일 것”

경기연구원, ‘AI 기본사회’ 지역 맞춤형 전략 제안

- AI 기본사회 아는 도민 5.4%, 설명 들으니 66.8% 필요성 공감
-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70.6%… 직무전환, AI 응급의료, 다편익 방지 정책 수요 높아
- 76.1% “일상생활 도움 된다”… 31개 시군 특성 반영한 ‘경기형 AI 기본사회’ 필요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 기본사회’라는 용어를 실제로 알고 있는 도민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3.4%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고, 31.2%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해,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AI 기본사회 개념을 사실상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념을 설명받은 뒤에는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응답자의 66.8%가 “AI 기본사회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해, 인지도는 낮지만 정책 방향 자체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AI 기본사회의 부상과 의미: 도민 인식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AI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도 76.1%에 달했으나 AI로 인해 본인이나 주변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70.6%로 나타났다. 특히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71.6%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고소득·전문직종 역시 AI발 고용 충격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인식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52.5%, AI로 인해 경기도 내 지역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응답은 46.0%로 조사됐다. 다만 지역 격차 문

항에서는 ‘보통’ 응답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당수 도민이 격차 확대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노동에서 일자리 위협을 받는 종사자를 위한 직무 전환·재교육·재취업 지원(52.0%)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고, 복지에서는 독거 어르신 돌봄로봇·스마트홈 안전시스템과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각 50%대)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교육에서는 단계별 AI 역량 강화 체계 구축(49.8%)이, 금융에서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를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하는 피해 예방 시스템(67.8%)이 전 분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50.7%)가, 의료 분야에서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병원과 연결하는 AI 응급의료 전달체계(60.9%)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혔다. 환경에서는 AI로 에너지를 효율화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정책(55.5%), 교통에서는 버스·지하철 배차와 노선을 실시간 최적화하는 스마트 교통 관리(60.0%)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77.5%는 거주 지역 내 AI 체험·학습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서비스 공급과 도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도민들은 범죄·사고·재난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고 일상의 필수 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보호형·안전형’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①개별 서비스가 ‘AI 기본사회’라는 큰 틀의 일부임을 도민이 인식하도록 통합 브랜드와 로드맵을 제시하는 체감형 소통 전략, ②6대 권역 공통 서비스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중 설계, ③AI 교육·체험 공간의 홍보 강화 및 안내 채널 통합, ④공공 수요와 민간 혁신을 연결하는 개방형 문제해결 플랫폼 운영, ⑤분산형 AI 인프라 실증과 공공데이터 기반 성과 공유 모델 등 AI 전환 자원 확보를 위한 혁신 모델 발굴이다.

연구진은 특히, 경기도 6대 권역이 디지털 기반과 산업 구조에서 차이를 보

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부(경원·동북권)는 디지털 기반 구축과 직업전환 교육이, 남부(동남·경부·서해안권)는 이미 형성된 활용 기반 위에서 금융보안·범죄대응 등 고도화된 수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AI 역량 교육, 딥페이크·보이스피싱 대응,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응급의료 전달체계 등을 전 권역 공통 서비스로 두고, 권역별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는 이중 구조 설계를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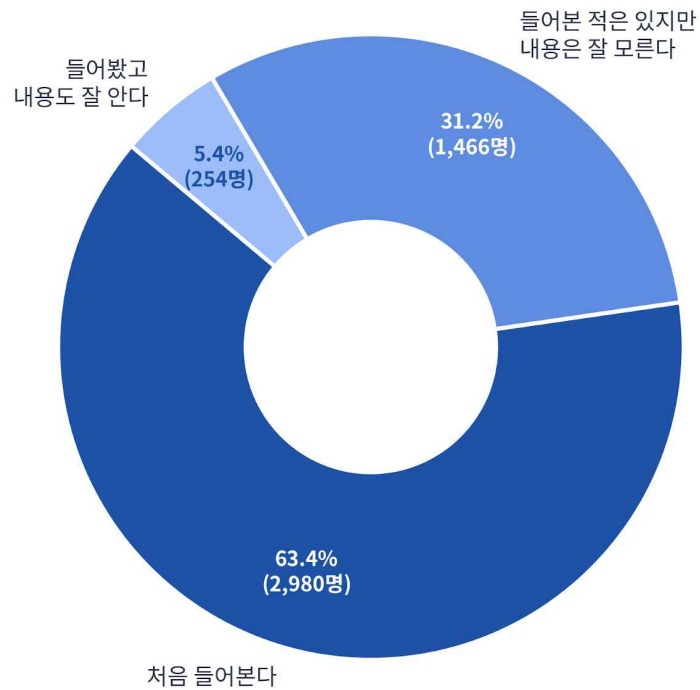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기본사회는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도민 대다수는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며 “개별 서비스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도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매 순간 ‘이것이 AI 기본사회라는 더 큰 정책의 일부’라는 것을 체감하게 하는 소통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경기도 권역별 특화 AI 기본사회 구현이 필요하며, 일자리 불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노동 전환 지원과 함께 AI 기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혁신 모델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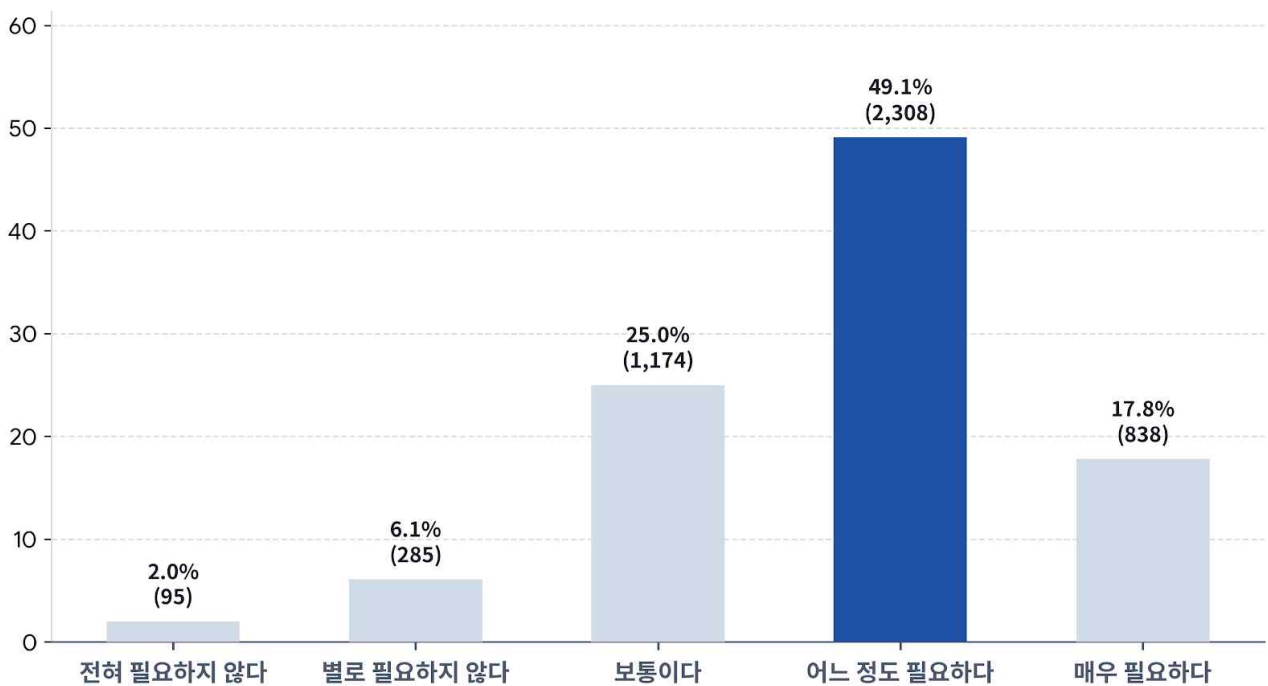
<AI 기본사회 개념에 대한 인지도>

(단위: %)(n=4,7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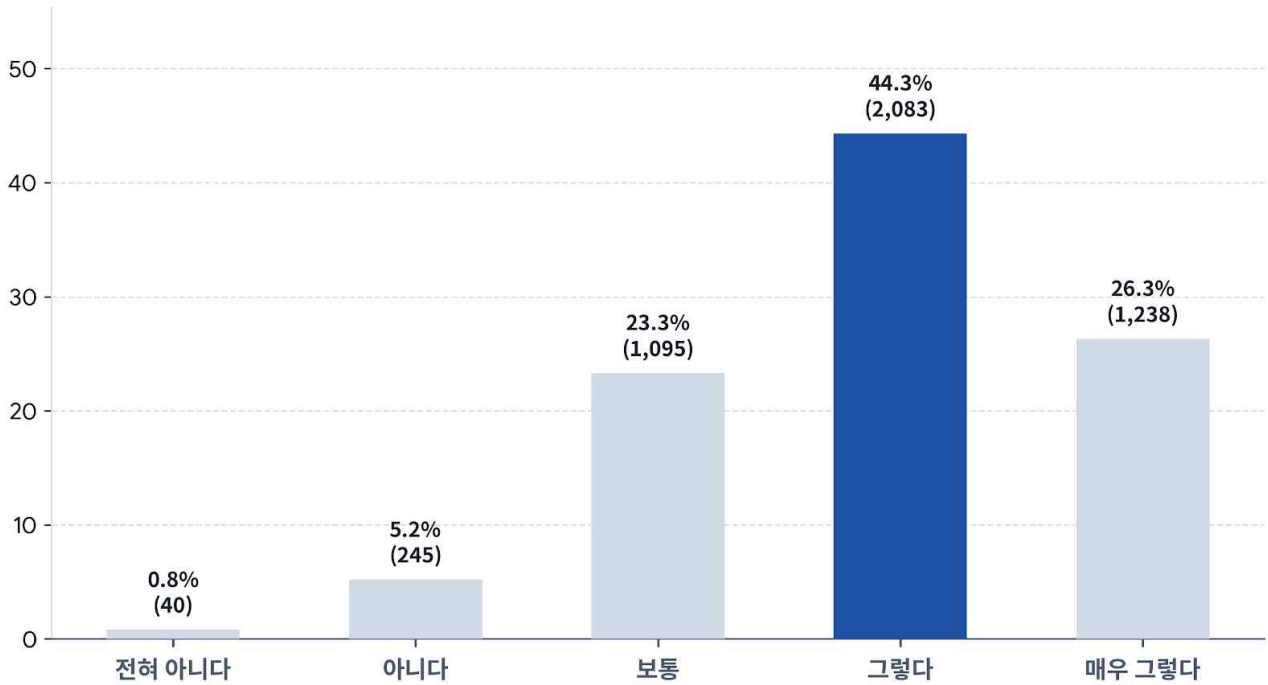
<AI 기본사회의 필요성>

(단위: %)(n=4,7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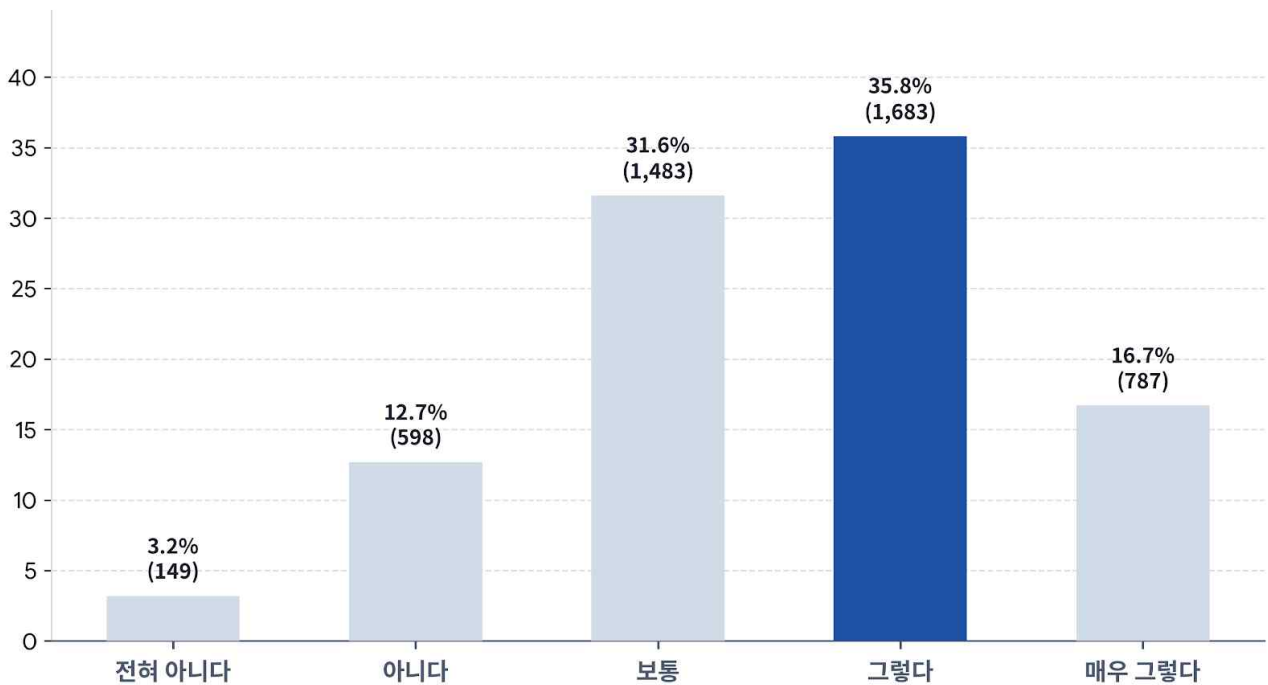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의견>

(단위: %)(n=4,700명)



<AI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n=4,700명)



<AI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준>

(단위: %)(n=4,700명)

